

KDI FOCUS

KDI FOCUS

2015년 3월 30일(통권 제52호)

자료문의 | KDI 홍보팀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길재길 15

Tel 044-550-4030

Fax 044-550-0652

집필자 | 김희삼 연구위원(044-550-4098)

KDI FOCUS는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

Korea'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김 희 삼 | KDI 연구위원

“ 노인의 빈곤과 소외가 심각한 가운데 자녀의 노부모 부양이 갈수록 줄고 서로 떨어져 살려고 하며, 노후생계의 책임은 자녀로부터 본인과 국가로 넘겨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지출이 노후준비를 저해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도 낮은 편이다. 또한 증세를 통한 보편적인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근로연령대의 지지도 높지 않다. 정부는 노인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되 가족의 순기능은 살리고, 지역사회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

I. 문제의 제기

까마귀 새끼도 자란 후에는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준다는 반포보은(反哺報恩)은 한국의 전통사회에 적용되는 말이었다. 대가족제도와 장

자 중심의 상속 및 부양 체계에서 장남은 노후의 주 부양자이자 동거자였고, 노인은 가족과 친족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와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또한

* 본고는 김희삼(2014)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하고 보완을 거친 것임.

제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2010~2014)에 포함된 설문 중 “노인은 요즘 별로 존경받지 못한다.”에 대해 한국은 찬성 응답의 비중이 81.8%나 되어 루마니아(85.3%)에 이어 조사 대상 51개국(평균은 58.9%) 중 2위로 나타났다. 한편, 동 조사에서 “노인은 사회에 짐이 된다.”에 대한 찬성 응답의 비중은 한국이 13.5%로 51개국 평균(18.1%)보다 낮았다. 이 두 설문의 응답 결과에서 노인을 사회적 짐으로 크게 여기지 않는 것은 전통적인 경로사상 때문이 아니라 아직 공적노후보장 시스템이 미성숙하여 고령층에 대한 공적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고스란히 노인빈곤으로 나타난다.

**노인이 소외와 빈곤 위험에
몰리는 동안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

근현대사의 굴곡을 겪어내고 개발연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고령층의 위상이 약화되고 소외와 빈곤 위험에 몰리는 동안 사적노후보장의 기능을 수행해 온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 또 지금 사람들은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족의 의미와 기능은 변해 갈 것이고, 국민은 정치권에 대해 생각한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인가구의 구성은
자녀가 없는 1인가구나
부부가구 중심으로 변화**

이에 본고에서는 노부모 부양행태와 부양의식의 변화를 고찰하여 노인부양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진단하고, 기본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상호영향, 부양의무자와 사각지대 문제, 노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족·사회·정부의 공조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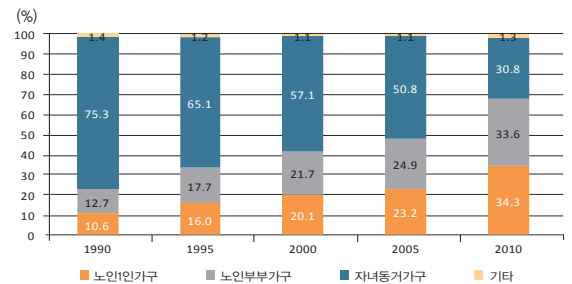
Ⅱ. 노부모 부양행태의 변화

**노부모 생활비도
장남 부담보다는 자기책임과
자녀 분담으로 변화**

1. 동거를 통한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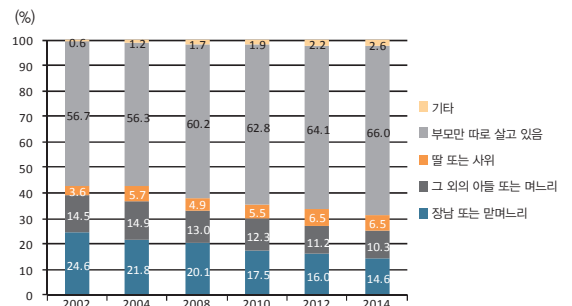
노부모 부양의 주된 방식이었던 동거를 통한 부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림 1]에서처럼

[그림 1] 노인가구 형태별 구성 비율의 추이(1990~2010년)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 가구임.
2) 기타 가구는 1세대 가구(노인부부가구 제외), 비전속가구, 미상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그림 2] 부모 가구 동거자의 변화(2002~14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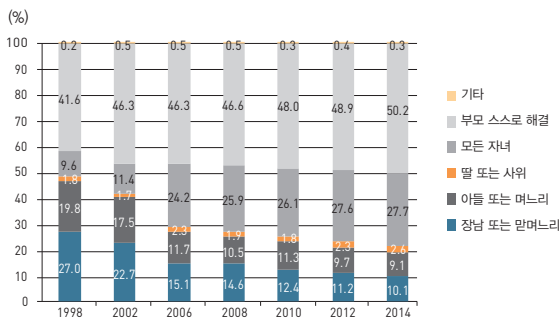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격감했다. 반면, 노인1인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34.3%로 세 배 이상 상승하여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을 상회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가구주의 부모가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를 보더라도, [그림 2]에서처럼 부모만 따로 살고 있다는 응답이 2002년 56.7%에서 2014년 66%로 증가했고, 자녀와의 동거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2. 생활비 제공을 통한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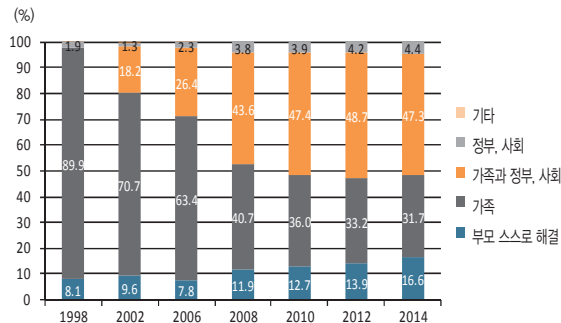
[그림 3]에서와 같이 가구주 부모의 생활비를 주로 제공하는 사람이 장남이라는 응답은 1998년 27%에서 2014년 10.1%로 줄고 모든 자녀의 부양 분담이 9.6%에서 27.7%로 늘었다. 부모 스

[그림 3] 부모의 주 부양자 변화(1998~2014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그림 4] 노부모 부양의 책임의식 변화(1998~2014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같은 기간 41.6%에서 50.2%까지 늘어 노후에 대한 자기책임이 절반 비율까지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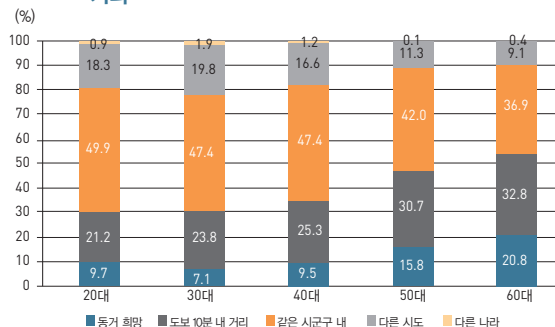
Ⅲ. 노부모 부양 및 노후대비 의식의 변화

노부모 부양과 노후대비에 관한 의식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준거가 되어 향후 우리나라 노후 보장의 현실이 될 수 있기에 주의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통계청 ‘사회조사’와 ‘KDI 행복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노부모 부양의 책임의식, 성인자녀와 부모 간의 희망하는 주거지 거리, 자녀에 대한 지출과 노후대비 간의 선택,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 증세를 통한 노인기초생활의 보장 등에 관한 의식을 살펴본다. 특히 필자가 2013년에 수행한 ‘KDI 행복연구’ 조사는 연령대별 의식 비교와 배경변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¹⁾

1. 노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그림 4]에서 연도 간 동등비교가 가능한 2002년 이후 2014년까지의 추이를 보더라도

[그림 5] 본인이 결혼한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모님 대책의 거리



자료: 'KDI 행복연구 2013'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70.7%에서 31.7%까지 감소했다. 그 대신 가족·정부·사회의 공동책임(18.2% → 47.3%)과 부모 스스로의 책임(9.6% → 16.6%)이라는 의견이 늘었다.

노후 생계를 가족과 정부 및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보는 인식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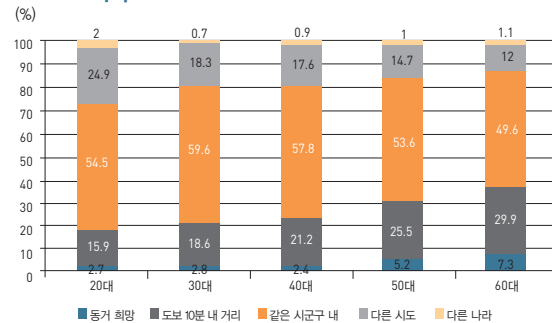
2. 부모와 자녀가 함께 또는 가까이 살기를 바라는가?

[그림 5]는 기혼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모님 대책의 거리를 연령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동거 희망 비율이 60대에서 20.8%, 50대에서 15.8%인 데 비해 40대 이하에서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도보 10분 내 거리를 희망한 비율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했다.

다른 배경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김희삼 [2014], p.61)에서도 젊을수록 결혼 후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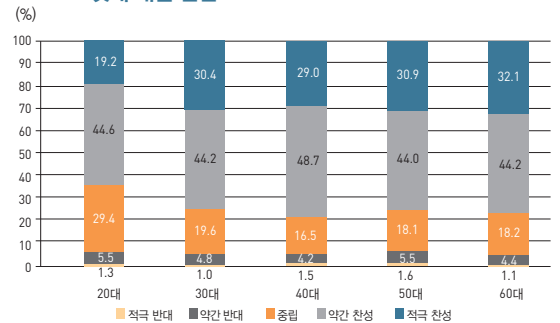
1) 2013년 10~11월에 전국 성인(20~69세) 남녀 3,000명을 조사한 'KDI 행복연구' 자료에는 노인부양 패턴과 의식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본고에서는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5점 척도)의 연령대별 비교와 함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특성(연령대, 성별, 만이 여부, 형제자매 수, 기혼 여부, 자녀 수, 교육연수, 소득, 자산 등)을 서열 로짓(ordered logit)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그림 6) 자녀가 결혼한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녀 집과의 거리



자료: 'KDI 행복연구 2013'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그림 7)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자료: 'KDI 행복연구 2013'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거나 가까이
살지 않기를 희망하고,
향후 자신의 기혼자녀와도
멀리 떨어지기를 희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모님 댁과 더 거리를 두기를 희망했는데, 부모님이 양가 부모 모두로 해석됐다면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는 환경에서 여성의 시대 스트레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희망하는 부모님 댁과의 거리가 더 먼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 응답자가 실제로 결혼한 후에는 부모님과 더 떨어져 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6]은 본인이 부모 입장에서 희망하는 기혼자녀 집과의 거리를 연령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앞의 자녀 입장에서보다 부모 입장에서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인은 부모와 동거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자녀와는 장차 동거하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나중에 기혼자녀와 좀 더 거리를 두고 지내려는 경향이 강했다.

3. 자녀에게 덜 쓰고 노후준비를 잘해야 하는가?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여
노후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찬성

과중한 자녀 교육비 부담과 고학력화 및 취업 지연 추세로 인해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연장되는 경향은 자녀에 대한 지출 때문에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양산하고 있다.²⁾

[그림 7]은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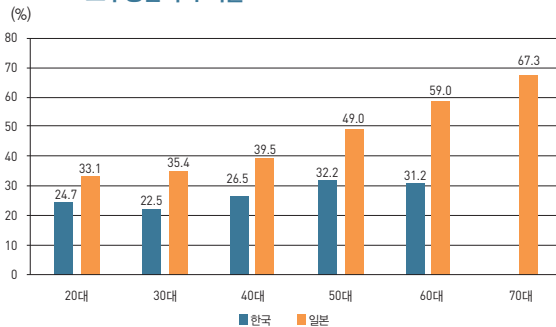
을 줄이고 본인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인데, 반대가 미미하고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다만,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20대에서는 적극 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유보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회귀분석 결과(김희삼[2014], p.66), 다른 요인이 통제됐을 때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의 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고령층의 부족한 노후준비와 자녀를 위한 지출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여 노후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는데, 이는 여성이 자녀 사교육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통념과 달라 보이지만, 자녀에 대한 지출의 이면에 본인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 수가 많을 때는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여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자는 의견에 동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전체소득이 높을 때는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의견에 덜 찬성하지만, 그중 본인 소득은 노후준비에 쓰고 싶은 마음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이 많을 때 자녀에 대한 지출보다 노후준비를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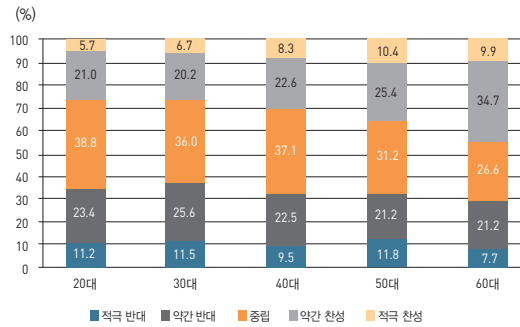
2) 현대경제연구원(2007)에 의하면 사교육비로 인해 줄어든 지출 항목 중 노후대비(저축, 재테크 등)가 가장 큰 비중(57.2%)을 차지했다.

(그림 8) 공적연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노후생활비의 비율



자료: 한국은 'KDI 행복연구', 일본은 오사카 대학 GCOE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그림 9)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찬반



자료: 'KDI 행복연구 2013'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는데, 이는 부동산을 자녀를 위해 처분하기보다 노후대비책으로 남겨두고 싶은 속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4.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까?

[그림 8]은 공적연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노후생활비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것인데, 동일 질문에 대한 일본인의 응답 결과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한국 응답자는 50대와 60대가 공적연금의 노후생활비 충당률을 30%대로 예상했으나, 20~40대는 모두 20%대에 그쳤다. 이에 비해 일본 응답자는 60~70대의 경우 공적연금만으로 60% 내외의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하거나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50대도 50% 가깝게 예상했다. 일본인도 젊을수록 연금의 필요소득 충당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나, 20~40대 모두 평균 30%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회귀분석(김희삼[2014], p.71)에서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자, 우리나라의 30대가 공적연금의 충분성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고, 40대도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근로연령대 인구에게 공적연금이 충분한 노후대비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 및 공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이 여성보다는 공적연금의 노후생활비 충당률을 다소 높게 예상했다. 또한 배우자가 있고, 자녀 수가 많고,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고,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 공적연금의 충분성을 상대적으로 낙관하는 편이었다.

5. 증세를 통해 모든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하는가?

[그림 9]에서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적인 생활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60대 응답자는 지지가 반대보다 우세했고, 50대에서도 지지가 반대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지지보다 반대가 많아 중고령층을 제외한 유권자 및 납세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유보적 의견을 가진 사람이 광범한 부동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김희삼[2014], p.69)에서 다른 요인을 통제하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비 지급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30대는 20대와 유사하게 낮은 지지 경향을 보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비 지급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했고,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찬성도가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과 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비의
20~30%만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20~40대는 부정적 의견

동산이 많은 사람은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비 지급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가족 역할과 관련된 노후보장정책의 고려사항

1.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상호영향

공적소득이전의 증대는

사적부양을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수반

앞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이 해왔던 역할을 점점 더 정부와 사회에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공적소득이전은 자녀로부터의 사적소득이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부의 노후보장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소득이전이 감소한다는 것이 발견됐다(김희삼[2006]; Kim[2010]).

따라서 정부의 노인부양 역할 강화는 가족의 기능 약화를 가속화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수요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공적부양이 사적부양을 구축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재정부담의 증가 외에도 노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의 약화, 그리고 노후대비 저축에 덜 노력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도 유발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2. 부양의무자 문제와 사각지대 해소

빈곤노인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생겼던 주된 원인은 자녀 등 법적 부양책임을 가진 자의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만 수급권을 부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었다. 2010년의 경우 비수급 절대빈곤층 245만명 중 117만명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보건복지부[2012. 6. 4]).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에 따라 간주부양

비가 산정되어 빈곤해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는 복지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다. 이에 국회에서 1년 7개월의 진통 끝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소득기준과 부양비 부과기준선을 상향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식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보건복지부[2014. 12. 9]).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해 온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길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의 철폐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부모 부양의 전통과 가족의 기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성찰이 필요한 문제이다.

가족은 생계 단위로서의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애착관계 형성을 통한 정서적 기능, 가정교육을 통한 교육적 기능, 그리고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형적인 단위로서 사회통합적 순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의 취지를 넘어 국가가 가족부양규범의 해체를 공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경우 가족의 기능과 위상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또한 노후부양 책임의식의 최근 추이를 보더라도 자녀 등 가족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의견이 줄고 는 있지만, 가족을 빼고 정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드물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소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은 복지에 대한 의식수준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급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과 수급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 내는 방식 중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보다 적합한 것은 후자로 보인다. 전자의 방식은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의

일소보다는 복지행정의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의

적극적 발굴이 바람직

확대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증세 등 비용부담에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인데, 앞서 보았듯이 증세를 통한 전체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근로연령대의 지지는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고령층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고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행태가 목격된다면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 신청자의 수급 필요성을 적절히 심사하고 미신청자 중에서도 수급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통합전산망이 부정수급의 적발 등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와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개별 사례의 심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담당인력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담당인력의 전문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을 확대하여, 이들이 현장탐방과 실사를 통한 판단에 기초해 필요한 부분의 개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중앙정부의 예산과 행정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가 빈곤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의 후생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저소득층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외형적인 치적 중심의 전시행정보다 취약계층도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단체장으로 선출하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3. 노후 삶의 질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협업

일반적으로 행복감이 40대 중반에 최저점을 찍고 그 후 회복되어 연령에 따라 U자형을 보이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 사회는 노년으로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는데, 주된 원인은 한국 노인에게 만연한 빈곤으로 보인다(Wang *et al.* [2014]). 이는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을 위한 선결 과제가 빈곤 해소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자살률은 반드시 생활고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소외감과 외로움의 발로인 경우가 많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왕래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2~3회 이상인 노인의 비율이 1998년에는 56.6%(12.3%는 거의 매일)였으나 2011년에는 48.3%(9.4%는 거의 매일)로 줄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65세 이상 응답자에게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0~100점)를 조사한 결과, 2006년에는 평균이 69.4였으나 2010년에는 평균이 66.3(65세 미만은 72.6)으로 나타났다.³⁾

반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노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1998년 50.2%, 2006년 55.8%, 2012년 63.2%로 오히려 높아졌다. 같은 기간에 노부모와의 동거비율 및 접촉빈도가 낮아져 온 것을 고려하면, 노부모와 자녀는 서로 소망하는 관계에서 비대칭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관의 세대 간 차이와 지속적인 저출산 기조를 감안할 때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지를 동지를 떠난 자녀에게 전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작금의 현실 및 시대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 대안은 고령층을 위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3) Roh *et al.* (2015)은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노인 정신건강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전국노인실태조사'(2008~11년) 자료에서 우울증과 인지 저하가 없고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전화 및 방문의 빈도와 3년 후 우울증 발생 위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 1회 이상의 전화통화와 월 1회 이상의 방문왕래를 동시에 한 집단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전화통화만 한 집단은 44%, 방문왕래만 한 집단은 49%, 전화통화도 방문왕래도 하지 않은 집단은 86% 높았다.

**약화되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가
보완할 필요**

보인다. 가구 내 대가족은 물론 친족 공동체가 가까이 모여 살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노인이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고독감을 완화하는데 지역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여가를 위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역마다 확충하고, 노인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며,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참여 역량이 떨어지는 취약 노인에게도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년들에게는 불우아동을 위한 멘토링 봉사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장려할 수 있다. 최근 80세 독거 할머니의 두발자전거 타는 꿈을 이뤄드린 청년들의 프로젝트는 그러한 모범인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2011~12년

에 시범 실시한 ‘청춘다방’과 ‘생활의 달인 교실’ 등도 평소 함께 어울릴 기회가 없는 노인과 청년의 세대 간 대화와 배움의 장을 마련한 사례인데, 이러한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는 현실은 경제적·정서적 양면에서 노후보장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빈곤해소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공적노후보장체계를 확충해 나가되, 가족의 순기능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점차 약화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은 사회, 특히 지역 커뮤니티가 보완해야 한다.⁴⁾ 이것이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사회, 정부의 바람직한 협업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희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 정책연구시리즈 2014-02, 한국개발연구원, 2014.
- 김희삼,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미시적 접근』, 김희삼·안종범,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한국개발연구원, 2006.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전성시대, 문제와 해법은?』, 설문조사 결과(<http://www.pcnc.go.kr/content.do?cmsid=149>).
- 보건복지부, 『2010년 빈곤실태조사』, 보도자료, 2012. 6. 4.
- 보건복지부,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2014. 12. 9.
-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한국개발연구원, 『KDI 행복연구』, 2013.
-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각년도.
- 현대경제연구원, 『사교육,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현대경제주평』, 통권 246호, 2007. 4. 27.
- Kim, Hisam,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Old-Age Security in Korea,” in Takatoshi Ito and Andrew K. Rose (ed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emographic Change in East Asia*, NBER-EASE Volume 19, Univ. of Chicago Press, 2010.
- Osaka University, “Global COE (The 21st Century Center of Excellence Program) Preference Parameters Study,” 2012.
- Roh, Hyun Woong *et al.*, “Frequency of Contact with Non-cohabitating Adult Children and Risk of Depression in Elderly: A Community-based Three-year Longitudinal Study in Korea,”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ume 60, Issue 1, January–February 2015, pp.183~189.
- Wang, Shun *et al.*, *Measuring and Explaining the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Research Monograph, KDI, 2014.
-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

4)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1인가구 급증에 따른 문제와 해법에 관해 2014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 전국적 설문조사에 응답한 942명(30~50대가 74.3%)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과 희망가족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개념(‘조상을 같이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 26.3%, ‘호적 등 증명서에 함께 기재된 사람들’ 9.4%,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1.2%)보다 새로운 가족 개념(‘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30.1%, ‘한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 14.9%,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 13.9%)에 해당하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개별화된 주거 공간 대신 ‘공동 거주제’와 같이 혈연관계가 없는 개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것에 대해 찬성 비율(84.1%)이 반대 비율(15.9%)을 압도했다.